특집 / UR 타결 이후 농정개혁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농업구조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 정 호*

1. 서 론
2. 농업구조 정책의 내용과 실적
3. 농업구조 변화로 본 정책의 성과
4.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농업 발전을 위한 구조정책의 과제

1. 서 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약한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흔히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노동+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기술+경영'을 재결합하는 경영주체로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토지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상당 수준의 인적자본이나 기술력에 더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발전 전략의 과감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생산방법이 아니라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농업인이 자력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추진해 오던 경쟁력 강화시책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1994년에 농촌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시책과 사업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일련의 농정개혁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고 있던 제도들을 대폭 정비하였다.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이제 농업구조개선사업은 제1단계 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5년간의

* 연구위원

농업구조개선사업, 그 중에서도 구조정책의 중심 과제인 농업인력 육성,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규모 확대,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등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농업구조 정책의 내용과 실적

2.1. 전문인력의 육성

농업인력 정책은 새로이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1981년부터 시작된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년부터는 매년 1만명씩 선정하는 체제로 대폭 확대하여 '97년까지 총 9만 7천여명(사업비: 국고융자 1조 3,616억원)의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였다. 또한 농업인력의 단계적인 육성체계를 갖추어 경영 실적이 우수한 후계자를 전업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1992년부터 후계자 육성의 보완대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고 분야별로 선정되지 못하여 자금운용이 경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는 경영 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업농가에 대해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자동화 등을 종합 지원하도록 하여, 1997년까지 3만 9천여호(사업비 1조 1천억원, 축산분야는 별도)를 육성하였으며, 2004년까지 쌀(5~20ha) 6만호, 축산 3만호,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3만호 등 모두 12만호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업농 중에서 경영규모, 생산기술, 시설장비, 경영능력, 소득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육성하였으며, 이러한 선도적인 경영체를 2004년까지 970개소 육성하여 각분야의 모델적인 전문경영체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가족전업농과 병행하여 규모의 이점을 살린 법인경영체를 육성하는 제도와 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위탁영농회사를 농업

표 1 **농업인력 육성실적**

단위(금액): 억원

구 분		1992까지	1993	1994	1995	1996	1997(P)	합계
농업인 후계자	물량 (명)	53,346	9,000	8,340	9,730	8,227	8,526	97,169
	금 액	4,803	1,500	1,380	1,850	1,813	2,271	13,616
전업농	물량 (호)	1,000	1,000	1,070	13,162	14,640	8,054	38,926
	금 액	500	500	550	3,229	3,229	2,699	10,806
선도농업 경영체	물량(개소)	-	-	-	70	80	-	150
	금 액	-	-	-	32	64	-	96

주: 1) 후계자 및 전업농 물량은 수산부문을 제외한 수치임.

2) 축산전업농은 19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추진한 관계로 집계되지 않음.

자료: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업무자료」에서 재작성.

회사법인으로 바꾸고 조세·금융상의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업적 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농업법인으로서의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들 법인의 경영안정과 단계적인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농기업경영자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수준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였다.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교육도 강화하였다. 도별로 1~2개교(총 12개교)의 자영농·수고를 지정, 1995~98년까지 552억원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된 실험실습 기자재, 기숙사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농림수산계 대학 중에서 16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선정, 1996~2000년까지 552억원을 연구·개발·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다.

1997년 3월 개교한 한국농업전문학교는 3개 계열 6개 학과(작물 2, 원예 3, 축산 1)의 240명 정원으로 설립되어 정예농업인 육성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영농고, 농업전문학교 등 농과계 학교의 졸업생을 농업인 후계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전문농업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였다.

2.2.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규모 확대

영농의 기계화, 쌀 경쟁력 제고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일반경지정리사업을 2004년까지 90만 2천ha(총 논면적 120만 6천ha의 75%) 완료할 계획이며, 필지규모 1ha 이상의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 및 밭작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밭 기반정비사업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은 1997년까지 74만ha를 실시하여 전체 논면적에 대한 경지정리율은 63%를 달성하였고, 그 중에서 대구획경지정리는 1만 4천ha를 실시하였다. 또한 용배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1995년까지 90만 7천ha(수리답율 75%)에 대한 용수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논의 수리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다.

농업경영의 규모확대 및 농지의 집단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지구입자금 지원, 농지매매, 농지장기임대차, 농지교환·분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은 1988년도부터 1993년까지 6,580억원을 약 7만 8천호의 농가에게 지원하였다. 1990년부터는 농지구입자금 지원방식을 영농

표 2 **생산기반정비 추진실적 및 계획**

사 업 명	목 표	1996까지	1997 계획	1998 이후
일반경지정리	902천ha	713.6	27.0	161.4
대구획경지재정리	200천ha	- 24.5	15.7	159.7
배수개선사업	207천ha(대상)	70	43	-
밭기반정비	110천ha	13.6	8	88.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2,000km	1,508	2,000	18,492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표 3 **농지매매자금 지원실적**

연 도	지 원 규 모	지원농가수	구입농지면적
1990	934억원	4천호	2천ha
1991	2,633	11	6
1992	3,156	12	7
1993	3,679	15	7
1994	2,152	8	4
1995	2,350	9	5
1996	2,665	10	5
합 계	17,569	69	36

자료: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규모적정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전업 또는 은퇴를 희망하는 영세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영농의지와 능력있는 농가에 장기분할 상환조건(연리 3%, 2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매도함으로써 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매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1990년부터 '96년까지 약 6만 9천호의 농가에 1조 7,569억원을 지원하였다.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농가와 은퇴농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장기(3~10년) 임대한 경우 임대료를 일시에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선지급한 후 전업농가에 재임대하되, 전업농가는 임차료를 매년 균등납부(시·군조례의 임차료상한 범위내)하게 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장기임대차사업으로서 1996년까지 1,300억원의 농지임차료 선급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영농의 능률화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농가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한 곳에 모아주기 위한 농지교환·분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6년까지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2.3.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농기계 반값공급 시책의 추진과 아울러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조직 중심의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농기계 보급지원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까지 매년 5천대씩 증가하던 농기계 지원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부터 2만 5천대 수준으로 늘어나 '96년말 현재 농기계 보유량이 3백여만대에 이르러 농가 100호당 경운기 60.0대, 트랙터 7.5대, 이앙기 18.1대, 콤바인 4.9대, 건조기 2.5대가 보급되었으며, 벼농사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은 97% 수준이

표 4 **농기계공급 및 자금지원 실적**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 량	157천대	164	198	222	246	266
지 원 액	4,248억원	4,990	6,312	6,178	6,798	10,169
- 보 조	521	568	2,223	2,854	3,109	3,594
- 융 자	3,727	4,422	4,089	3,324	3,689	6,575

표 5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실적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 리 용 부품확보	사업량(개소)	500	579	611	374	349	186
	지원액(억원)	250	240	230	250	250	153
수리용 장 비	사업량(개소)	3	11	21	14	18	23
	지원액(억원)	13	32	20	10	10	14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량(개소)	-	-	-	-	100	800
	지원액(억원)	-	-	-	-	55	464

자료: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되었다.

이와 아울러 농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면세유 공급 등 농기계관련 농가부담 경감시책의 추진으로 구입비 경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농기계 사후관리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사후봉사업소의 육성, 수리용 부품의 확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에도 중점 지원하였다.

자본·기술 집약적이며 늘어나는 고품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원예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정비, 생력 농기계공급 및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유리온실, 첨단생산시설과 예냉시설 등 유통시설을 갖춘 생산·유통 종합단지를 2004년까지 과수 900개소, 시설채소 530개소, 화훼 235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4.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농림수산업 분야에 타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응용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애로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농림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현장애로기술개발에 1,650억원, 첨단기술개발에 3,000억원 등 총 4,6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책정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96년까지 787건의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현장애로기술 110개 과제를 완료하여 농림수산업 현장에서 활용중이며, 첨단기술 322개 과제 등은 계속 연구중이다.

농림수산 기술개발과 보급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국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여 기초기술, 미래지향적 기술은 중앙정

표 6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목 표	1995까지	1996	1997~98	1999 이후
과 실	900	150	150	300	300
시 설 채 소	530	80	50	90	310
양 념 채 소	170	20	10	20	120
화 훼	235	25	20	45	145
특 용 작 물	1,339	80	138	278	834

자료: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부에서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기술 실증시범포, 과학영농시설, 초고속 원격 영농지도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농림수산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부설기구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농림수산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기술수요 조사 및 예측, 기술개발사업의 장단기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1996년말까지 농림수산관련 12개 기관과 각기관 전용회선을 통해 통신망을 연결,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외 농림수산정보의 적시 제공, 농업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자 상호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품목별 정보망 구성 등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농업인의 자조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3. 농업구조 변화로 본 정책의 성과

3.1. 농업인력의 정예화

1995년도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표 7 및 표 8),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1985~90년간과 1990~95년간을 비교하면 인구의 절대 감소는 둔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도 1985~90년간에는 290만명이 감소하였으나 1990~95년간에는 153만명으로 감소 폭이 둔화되었다. 이것은 농촌에 살면서 다른 산업에 취업하는 재촌탈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이다. 즉,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농가수는 줄어들면서 규모화되고 있는 반면, 농외취업을 겸하는 겸업농가의 비중은 1990년의 40.5%에서 '95년에는 43.3%로 증가하였다.

한편, 농가인구의 노령층이 증가하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나, 반면에 생산연령인구는 다소 증가하였다. 30~50세까지의 인구 비중은 지난 5년 사이 차이가 거의 없고

표 7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

구 분		1985	1990	증 감 (비 율)	1995	증 감 (비 율)
가구 (천호)	총 가 구(A)	9,571	11,357	1,786	12,961	1,604
	농 가 구(B)	1,926	1,767	△159	1,501	△266
	(B/A)	(20.1)	(15.6)	(△8.3)	(11.6)	(△15.1)
인구 (천명)	총 인 구(A)	40,448	43,411	2,963	44,606	1,195
	농촌인구(B)	14,005	11,102	△2,903	9,572	△1,530
	(B/A)	(34.6)	(25.6)	(△20.7)	(21.5)	(△13.8)
	농가인구(C)	8,521	6,661	△1,860	4,851	△1,810
	(C/A)	(21.1)	(15.3)	(△21.8)	(10.9)	(△27.2)

표 8 **전·겸업별 농가수 및 비중**

단위: 천명, %

연 도	농 가 수	전 업 농	겸 업 농		
				농업위주	겸업위주
1985	1,926 (100)	1,518 (78.8)	408 (21.2)	168 (8.7)	240 (12.5)
1990	1,767 (100)	1,052 (59.5)	715 (40.5)	389 (22.0)	326 (18.5)
1995	1,501 (100)	849 (56.6)	652 (43.4)	277 (18.4)	375 (25.0)

자료 : 농림부, 「1995 농업총조사」.

60세 이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5~64세의 생산 연령층의 인구 비중은 1990년의 67.9%에서 '95년에는 69.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고학력화와 함께 농업경영 인력의 소수정예화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농가인구의 학력을 보면,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아직도 50% 이상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인구는 1990년의 27.7%에서 '95년에는 30.3%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경영주 가운데 30~40대 경영주 비율은 1990년의 33.6%에서 '95년에는 27.1%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영주 비율은 전체의 16.1%이고, 이 가운데 30~40대의 경영주가 33.2%를 차지하고 있다.

3.2. 상업농 진전과 영농형태의 다양화

우리 농업이 상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는 고도산업사회의 시장 경제라는 틀 속에서 탄탄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이 전문화·규모화되면서 시장지향적인 상업영농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1995년 농업총조사에 의하면(표 9 및 표 10), 시장지향적인 상업적 영농이 증가하여 전체 농가의 91.6%(1,375천호)가 판매를 위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과수·축산·화훼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타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젊은 경영층의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고령층보다 높다.

또한 연간 농축산물 판매농가수는 137만 5천호로서 전농가의 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간 판매금액 5천만원 이상의

표 9 **영농형태별 농축산물 판매금액 규모, 1995**

단위: 천호, %

구 분	합 계	논 벼	채 소	과 수	축 산	화 훼	전작 등
총농가수	1,501 (100)	823 (100)	247 (100)	144 (100)	156 (100)	10 (100)	121 (100)
1천만원미만	1,063 (70.8)	674(81.9)	150 (60.9)	71 (49.2)	74 (47.7)	4 (35.5)	91 (74.5)
1~3천만원	370 (24.7)	138 (16.8)	81 (33.0)	61 (42.3)	59 (37.6)	5 (45.3)	26 (22.3)
3~5천만원	54 (3.6)	10 (1.2)	13 (5.4)	10 (6.9)	16 (10.4)	1 (14.9)	3 (2.6)
5천만원이상	14 (0.9)	1 (0.2)	3 (0.7)	2 (1.5)	7 (4.4)	0.4 (4.3)	0.7 (0.6)

표 10 **채소 · 축산 · 과수농가의 품목별 농가 비중**

연 도	채 소	축 산	과 수
1990	일반 : 77.2% 시설 : 22.8%	한육우 : 29.5% 젖 소 : 26.8% 돼 지 : 24.1% 닭 : 10.7% 기 타 : 8.9%	사 과 : 36.3% 배 : 6.6% 포 도 : 15.3% 감 귤 : 17.3% 복숭아 : 11.6%
1995	일반 : 71.0% 시설 : 29.0%	한육우 : 62.7% 젖 소 : 12.1% 돼 지 : 10.7% 닭 : 5.5% 기 타 : 9.1%	사 과 : 28.9% 배 : 8.0% 포 도 : 21.0% 감 귤 : 15.9% 복숭아 : 7.7%

자료: 농림부, 「1995 농업총조사」.

농가도 1만 4천호(0.9%)에 달하고 있다. 영농 형태별로 판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논벼 0.2%, 채소 0.7%, 과수 1.5%, 축산 4.4%, 화훼 4.3% 등이다.

상업적 영농이 진전되면서 영농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즉, 벼농사나 전작에 의존하는 농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채소나 축산, 과수, 화훼 등의 작목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채소농가는 시설채소, 축산농가는 한육우, 과수농가는 배와 포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논벼 농가의 비중은 1990년의 69.7%에서 '95년에 54.8%로 감소한 반면에, 채소, 축산, 과수, 화훼농가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21.2%에서 37.1%로 증가하였다. 또한 채소농가 중에서 시설 농가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22.8%에서 29.0%로, 축산농가 중의 한육우 농가 비중은 29.5%에서 62.7%로, 과수농가 중에서 배나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의 비중은 21.9%에서 29.0%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농업이 종래의 토지이용형 농업 중심의 생산구조에서 기술 · 자본 집약적인 시설형 농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3. 경영규모 확대와 전문경영체의 출현

영세소농 구조 속에서도 경영규모 확대가 진전되었으며, 특히 젊은 경영층일수록 경영

표 11 **대규모 경영의 농가수 변화**

단위: 호, %

구 분	1980	1990	1995	연평균 변화율	
				1980~90	1990~95
경지 3ha 이상	31,510	43,868	70,389	3.3	9.9
쌀 3ha 이상	9,552	17,758	34,186	6.3	14.0
한우 30두 이상	281	3,091	9,516	27.0	25.2
돼지 500두 이상	147	1,328	3,463	24.6	21.2
시설면적 2천평이상	1,023	5,952	16,995	19.2	23.3

자료: 농림부, 「1995 농업총조사」.

표 12 평균농가와 후계자, 전업농의 경영규모 비교, 1995년

구 분	평균농가	후계자	전업농 육성대상자	
			후계자 출신	비후계자 출신
경지규모 (ha)	1.32	2.56	4.3	3.79
농가소득 (천원)	21,803	24,384	34,630	26,698
농업소득 (천원)	10,469	20,136	31,002	24,517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규모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 규모 계층별로 보면, 3ha 이상의 농가는 1990년의 4만3천호(전농가에 대한 비율 2.4%)에서 1995년에는 7만1천호(4.7%)로 늘어났으며, 5ha 이상 농가는 같은 기간 동안에 6천호(0.3%)에서 1만6천호(1.0%)로, 10ha 이상 농가는 7백호에서 2천호로 증가하였다. 1995년 현재 30~40대 경영주의 경영규모 분포를 보면, 3ha 이상 계층에서 47.0%를 차지하고 있으며, 5ha 이상에서는 53.4%, 10ha 이상에서는 57.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평균농가에 비하여 후계자사업 또는 전업농사업 지원농가의 경영규모 및 소득 수준이 높으며, 후계자 출신의 전업농이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하여 규모화·전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 경영농가일수록 겸업화하고 대규모 경영농가일수록 전업화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채소, 과수, 축산, 화훼분야에서 젊은 고학력층에 의한 전업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1ha 미만 농가의 전업농가 비율은 51.5%이고, 5ha 이상 농가의 전업농가 비율은 68.8%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로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은 전체 평균이 27.9%이지만 채소에서는 31.6%, 과수는 32.1%, 축산은 42.4%, 화훼는 58.4%이다. 학력 분포에서도 고졸 이상의 경영주 비율은 전체 평균이 16.1%였으나 채소는 16.2%, 과수는 24.7%, 축산은 23.6%, 화훼는 53.2%이다.

농업법인은 1990년 제도가 발족한 직후에는 미미한 설립을 나타냈으나, 1994년부터 정책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생산자조직 차원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설립이 증가하였다. 1996년말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3,487

표 13 농업법인 설립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1990~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농업회사법인	65 (4.6)	166 (11.7)	280 (19.7)	338 (23.8)	326 (23.0)	244 (17.2)	1,419 (100.0)
영농조합법인	27 (0.7)	60 (1.7)	230 (6.6)	1,016 (29.1)	1,207 (34.6)	947 (27.2)	3,487 (100.0)
합 계	92 (1.8)	226 (4.6)	510 (10.4)	1,354 (27.6)	1,533 (31.2)	1,191 (24.3)	4,906 (100.0)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표 14 영농형태별 지역특화 계수

논 벼	과 수	채 소	특 용	화 훼	전 작	축 산
전북 (1.29)	제주 (6.02)	강원 (1.20)	충북 (3.34)	경기 (3.53)	제주 (4.72)	경기 (1.46)
전남 (1.14)	경북 (2.27)	경남 (1.16)	경북 (1.55)	제주 (1.50)	강원 (3.70)	경남 (1.41)
경기 (1.08)	충북 (1.20)	경북 (1.05)	강원 (1.43)	경남 (1.12)	전남 (1.59)	충남 (1.04)

주: 특화계수의 순위가 높은 지역의 우선순위로 3위까지 선정함.
자료: 농림부, 「1995 농업총조사」.

개소, 농업회사법인이 1,419개소가 설립되어 총 4,906개의 법인경영체가 설립되었다.

3.4. 지역농업의 특화

개별경영이 규모화·전문화되면서 농작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영농 형태가 지역별로 특화되고 있다.

<표 14>에서 도별 특화계수(품목별 전국 농가수에 대한 도별 비율)를 보면, 논벼는 전북, 전남, 경기의 순으로, 과수는 제주, 경북, 충북의 순으로 특화되어 있다. 채소는 강원, 경남, 경북의 순으로, 축산은 경기, 경남, 충남의 순으로, 그리고 화훼는 경기, 제주, 경남의 순으로 특화되어 있다. 특히 가축 사육은 대도시의 소비층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한육우는 경북에, 젖소, 돼지, 닭은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4.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1.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는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정비하여 이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업농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만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농지정책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개간·간척 등에 의한 농지조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토여건상 산업용 토지수요의 대부분을 농지와 산지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최근에 들어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부터 농지전용 면적이 산지전용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내부에서도 농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신고전용)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계획적인 농지전용과 값싼 산업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어촌산업지구의 지정 등 사전용도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전용도 지정 그 자체가 지가를 상승시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보다 값싼 새로운 농어촌산업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먼저 농지와 산지를 통합한 장기적인 전국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유휴농지나 산지를 활용한 보다 체계적인 택지, 공단용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하는 농지 전용에 대해서도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진흥

표 15 산업용 토지의 농지 · 산지 공급 현황

단위: ha, %

구 분	1985-90	1991-93	1994	1995
농 지	30,760 (51)	37,323 (64)	11,984 (65)	16,279 (74)
산 지	29,589 (49)	21,073 (36)	6,503 (35)	5,715 (26)
계	60,349 (100)	58,396 (100)	18,487 (100)	21,994 (100)

자료: 농림부 농지관리과

지역밖 농지를 세분류(지구 분류)하고 지구별 전용기준을 차별화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많은 부분을 농업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농촌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용으로 이용되어야 할 농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개발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 또는 매매하는 선매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지가격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의 생산기반 정비는 그동안 논농사 위주로 실시되어 밭작물을 위한 정비 수준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생산기반 확충은 정부가 투자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분야이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과 우선 순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의 경지정리 사업규모는 식량자급 및 농지관리 등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정확한 농지자원 조사와 함께 경지정리사업의 비용편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지정리 계획면적에 대한 사업비 투자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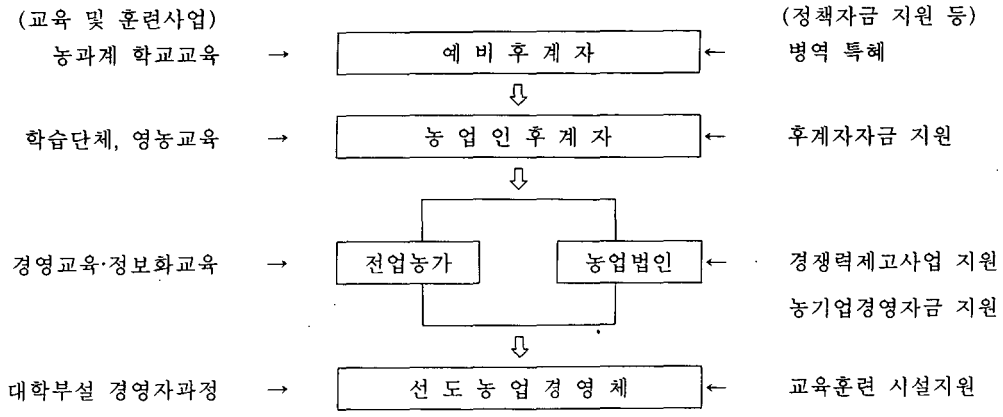
경지정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경지정리 사업비가 많이 드는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농기계 진입로의 개설, 용수보강개발, 수로 정비 등 공사비가 저렴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의 경우에도 단위필지 규모를 1ha, 0.5ha 등으로 다양화하고, 필지규모가 1,200~1,500평 정도이고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의 경우 기존 용배수로를 개거화하여 농로를 확 · 포장하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농업인 호응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2.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시책의 체계화

농업인력 정책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적 · 무차별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 농업을 담당할 전업적인 기간농가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농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특히 전업적 기간농가 육성과 병행하여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의사에 따른 정책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규모화 · 전문화된 경영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인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책지원이 선행해 온

그림 1 **현행 농업인력 육성시책의 체계**



역효과가 지적된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대한 과도한 보조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업 선정시의 과당경쟁을 비롯하여 경영의 부실화를 야기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농업법인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 하에서(초기의 영농조합은 영세소농의 협업경영, 위탁영농회사는 농작업대행업체) 정책지원이 선행함으로써 법인경영 내부에서도 협업화나 법인화의 유리성을 찾기 보다는 단지 정책자금 수혜를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을 위한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목표관리제에 의한 지원방식의 도입과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품목별 경영모델의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육성대상, 정책수단, 사업량 등을 차별화하며, 유사한 정책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인후계자를 전업농의 예비단계 육성시책으로 정책적 성격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후계자육성사업 대상자의 연령을 점차 낮추어 신규취농자 및 장래의 전업농 예정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 및 사후관리, 경영개선을 위한 첨단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교육훈련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지역농업계획에 기초하여 선정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영체 육성의 총괄 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사업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하며, 중앙에서는 지역의 사업규모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 분야와 적정 사업규모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을 과거와 같은 협업농 범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정책지원으로 법인 설립이 조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경영

목적의 법인과 기타사업의 법인(공동조직, 유통조합 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사업의 대상을 구분하며, 가공·유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전문조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규취농 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업유관기관에 취농정보센터를 상설하여 취농희망자에게 취농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을 추진하고, 농과계학교에 신규취농을 지원하는 단기과정의 연수프로그램 운영, 대졸 취농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시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4.3. 영농규모화 지원사업의 강화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매매사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 성격의 저리(연리 3%, 20년 상환) 융자지원으로 농지매매시장과 농지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규모화 비용이 덜 드는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농지매입자금 저리 지원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자발적인 투자보다는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우려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렇게 저리 융자를 계속하면서 융자 재원인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은 고율의 차입금(국채관리기금 12~14%, 재특 5~6%)에 의한 재원조달과 저리(3%) 융자로 기금잠식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표 16>에서 1996년말까지 농지관리계정의 재원조달 현황을 보면, 정부 출연금은 27%, 국채관리기금과 재특 차입금이 각각 39%와 15%, 그리고 원리금 회수는 19%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원조달 방식이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2000년 이후에는 기금 잠식을 초래하게 되어 규모화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의 문제점으로, 농지 매입자 및 농지임차인(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가격 및 농지임차료가 상승하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1997년부터 실시

표 16 **농지관리계정 재원조달 현황(1996년까지)**

구 분	정부출연금	국채관리기금	재특차입금	원리금회수	계
금액 (억원)	10,444	15,021	5,554	7,093	38,112
구성비 (%)	27	39	15	19	100

표 17 **농지관리기금 잠식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1996까지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정부출연금	10,444	0	0	0	0	0	10,444
결손추정	3,742	1,203	1,077	1,429	2,033	2,454	11,938
출연금잔액	6,702	5,499	4,422	2,993	960	△1,494	△1,494

자료: 농림부 농지관리과.

된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으로서 농지 유동화 효과가 미미하며, 이탈농의 주된 계층인 1ha 미만의 영세농가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인이 적은 실정이다.

영농규모 확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이윤추구 동기에 입각하여 시장원리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농가들의 투자재원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금 조달을 금융정책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장기적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가격 및 농지임차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농지공급 촉진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농지소유자에게 해당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수혜대상의 연령 제한을 하향 조정하여 공급을 늘리고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며, 일시불로 지급하기보다는 농민연금에 더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규모화사업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며,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의 잠식과 적자구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자율이 높은 국채관리기금을 재특차입금이나 정부출연금으로 전환하고 농지매매자금의 이자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농어촌진흥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부족한 재원의 보완 차원에서 농협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4.4. 농기계 지원방식의 조정

그동안 농업기계화 정책은 공급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농업내부에서 농업기계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응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배경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1993년부터 착수된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은 중소농가에 대한 농기계 보급을 빠르게 진전시켰다. 또한 경쟁력 제고시책으로 쌀전업농과 농업회사법인들의 농기계 보유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농기계가 과잉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농기계의 과잉공급은 결과적으로 작업면적의 축소를 가

표 18 **주요 농기계의 1대당 연간 작업면적**

단위: ha

연 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1985	3.4	14.1	4.6	2.1	10.1
1990	3.2	19.6	4.4	2.2	11.3
1991	2.7	17.7	4.2	1.8	10.5
1992	2.6	18.5	4.3	1.6	11.5
1993	2.2	15.6	2.7	1.6	9.5
1994	1.9	17.3	3.6	1.5	10.3
1995	1.6	16.6	3.6	1.3	9.7

자료: 농림부 및 농기계협동조합.

져오게 되어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농기계의 1대당 연간 작업면적은 1990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작업수탁을 둘러싼 과당경쟁 뿐만 아니라 전업농의 경영규모화를 역행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소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며 UR 타결 이후 농업인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투융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지되어야 할 사업이며, 정부는 1998년부터 이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농가 보조지원을 융자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규지원은 축소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하여 대체농기계 구입지원을 확대하며, 쌀전업농 및 농업회사법인의 기계구입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농업 발전을 위한 구조정책의 과제

우리 농업은 1993년 UR 타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지원, 그리고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다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정 추진방식도 상향식 자율농정 체계로 전환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농업인의 창의적인 역량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농정제도가 바뀌고 농업부문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이 농업생산의 핵심 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농업생산성과 비교하면 우리의 생산성 수준은 아직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더욱이 21세기를 향해 우리 농업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21세기 농정 여건을 전망하면, 대외적 여건으로는 거의 전품목에 걸쳐 실질적으로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이다. 쇠고기가 2001년에 개방되며, 2004년에는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있고, 특히 99년부터 시작되는 WTO후속협상에서는 고율관세나 국영무역 등의 보호무역장벽 완화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나 사막화의 확대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식량수급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나라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국민소득의 신장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추세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의 상승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고소득시대에서 농산물 소비도 고도화되고 유통시장 개방이나 신유통체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해 주지 않는 농산물이나 농업이 유지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적인 복지수요의 증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지방자

치제 정착에 따른 자율농정의 역할 증대도 중요한 변화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그동안의 구조개선사업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농업 발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전략과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로, 시장기능 강화와 농업의 자생력 증대를 위한 농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업을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 위주의 1차산업에서 1·2·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장원리에 의한 복합식품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농업경영인 육성하고, 타분야의 기술과 자본 및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농업의 구조조정를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기반도 경지정리, 농업용수, 기계화 등의 단순한 생산기반 확충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정보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역할을 증진시켜야 한다. 농업이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공익산업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주곡의 안정적 자급은 선진국가의 기본적 요건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해야 한다. 현재 농업의 환경보전 효과가 연간 7~1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1세기 농업은 고소득 국가의 환경수요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생명산업, 정서산업, 공익산업으로 더욱 중시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 공업화 위주의 성장 뒷받침을 위한 농정에서 적정 농업성장 유지 및 소득 재분배 차원의 농정을 적극 추진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의 상대적 감소는 불가피하나 농업구조, 타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WTO 체제에 의한 수입개방과 관세율 저하로 단기적인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함께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농촌지역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산업화를 촉진하면서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개방체제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 자율농정 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와 관련기관 및 농업인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농업인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유지에 노력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협동을 기초로 한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조직으로 전환하여 수익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기초로 자생력을 갖춘 전문경영체로 자력 성장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농정추진 체계도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율농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지지를 축소하면서 생산자조직의 수급조정 기능과 직접지불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농업여건 및 재정여건에 맞는 지방농정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사업의 통합, 국고 차등보조제 등으

로 지방정부의 재정 재량권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율 농정 체제하에서 농업인의 창의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정일. 1993.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추진방향," 「농촌경제」 1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정일 외. 1996. 「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1997.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1997.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국가과제 토론회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1994.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_____. 1994. 「농어촌발전대책수립 추진경과」.

농림부. 1996. 「'97 농림사업시행지침서」.

_____. 1996. 「1996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_____. 1996. 「제2단계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_____. 1997.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상황」(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 보고자료).

_____. 1997. 「농림업 주요통계」.

_____. 1997.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농정교육교재).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1997. 「업무자료」.

농림부 농정발전기획단. 1997. 「21세기 선진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시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농어촌투융자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자료).